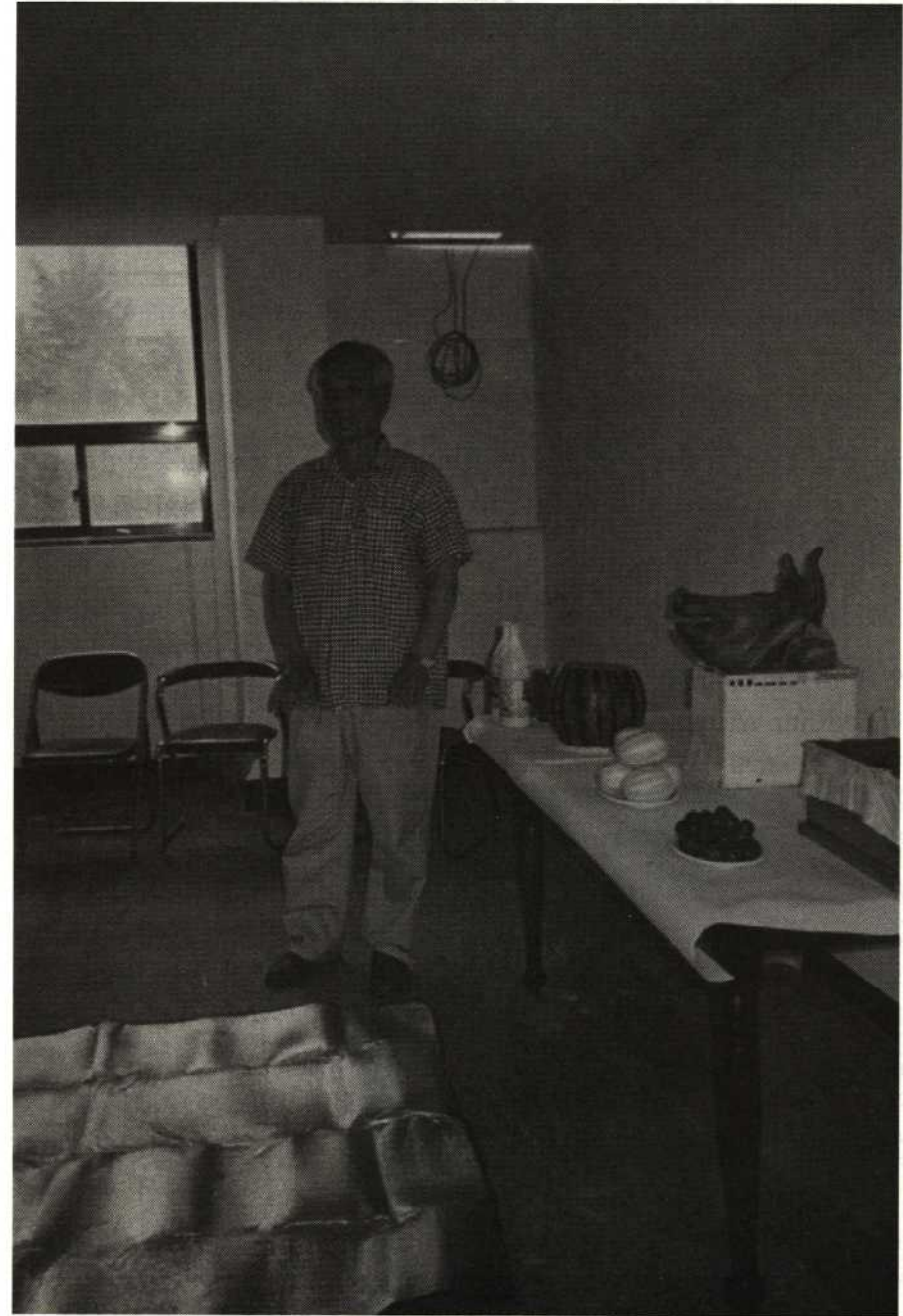


##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사회단체 역시 정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으나, 정보화 전략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과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이를 수행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교육팀을 구성하여 정보통신 교재 제작,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의 제공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98 노동미디어 주간에 맞춰,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식 발족 전에 시행한 인터넷 및 PC 통신 사용법 교육(1998년 11월 9일~10일)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주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홈페이지 제작, 오피스 사용법, 리눅스 등 주로 기술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국과 함께 '정보운동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육방식도 정기교육, 방문교육, 위탁교육 등 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자체적인 교육장이 없어서 한겨레 문화센터 등 외부 교육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방문교육을 하다가, 1999년 10월 29일 20석 규모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장을 개관하고 정규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장 마련 과정에서 김진균 대표의 제자였던 이진범, 좌용식, 김성목, 백광조, 이현수, 강정석, 최정욱씨 등이 교육장 소프트웨어 마련을 위해 500만원의 재정 후원을 했으며, 자원활동을 하던 이동영씨는 500만원 상당의 프로젝터를 기증하기도 했다. 교육장 마련 이후 2000년에는 총 100 여개 단체에서 400여명의 수강자를 배출

하였다. 그러나 2002년을 전후하여 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이 축소되었고, 결국 2003년에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교육장 개관 기념 교사

## 정책실 신설과 정보인권운동

초창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교육 사업에 집중하였다. '독립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개입은 통신연대를 매개로 지속되었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1998년 12월 10일, 사이버권리선언(<http://freespeech.jinbo.net/declare.html>)을 발표하였으며, 『사이버권리백서』를 발행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 상의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통신연대 내에 <작업장감시연구팀>을 구성하고 노동감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99년 노동미디어행사 때 발표하였다. 1998년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통합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폐기하였으나, 1999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을 벌이면서 강제 지문날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 거부운동'과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통신연대, 정보연대SING,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한국과학기술청년회와 함께 <지적재산권과 독점 세미나팀>을 구성하여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하였으며, 1999년 2월 6일 <지적재산권과 독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 세미나팀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발전하게 된다. 1999년 초에는 정보통신부의 014XY 요금

의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네티즌들과 함께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 정보통신 정책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사회적으로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및 정보통신검열 반대운동을 이끌던 통신연대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비록 검열반대나 지문날인 거부 등과 같은 활동은 지속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정책 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혹은 '정보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세상 BBS나 웹호스팅과 같은 기술적, 서비스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여타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업자-이용자'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져갔다. 이는 내부 활동가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초 정책실(2002년에 정책국으로 변경)을 신설하고 제반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정책실 신설 후 다양한 정보운동 이슈 제기로 정보운동단체로서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공유연대 IPLeft(1999년),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2000년), 지문날인반대연대(2001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1년),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2001년) 등 관련 이슈별 연대체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한편, 2001년부터는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국회가 반영해야 할 정보통신정책 과제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2002년 대선에서는 <정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 선거 33대 공약>을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 과제로는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을 선정하였다.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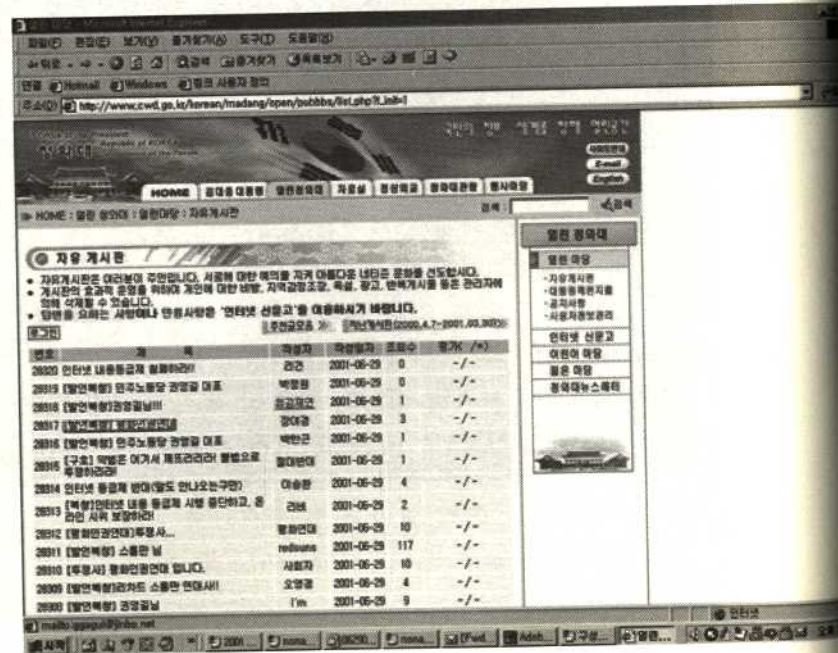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영화나 서적에 등급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나 서적의 경우는 소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외의 내용등급제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정통부의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띤 정부의 검열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은 이 법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0년 8월 20일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누리꾼들은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와 항의글을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8월 16일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2000년 10월 20일, 정부의 검열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검열 반대 공동행동>이 꾸려졌다. <정보통신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시위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기자회견

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등이 참여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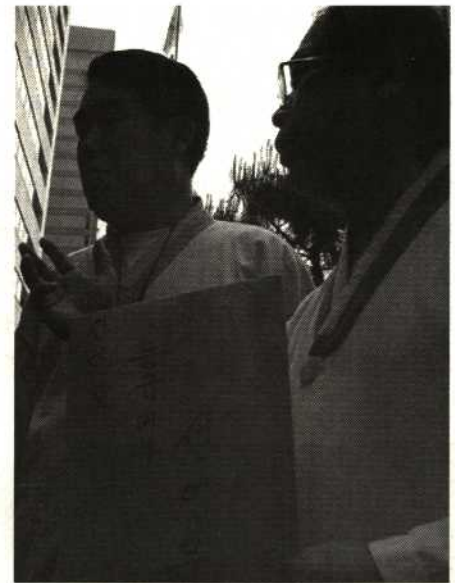
열반대 공동행동>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를 비롯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연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

결국 이 법은 등급제 의무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로 2000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듬해인 2001년에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내용 등급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즉, 청소년유해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판정된 홈페이지의 경우 ㉑라는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걸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사이트 파업 (2001년 6월 29일~7월 2일),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2001년 10월 22일~12월 20일), 거리 문화공연 등을 통해 격렬히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http://freeonline.or.kr/>) 홈페이지 문을 스스로 닫는 사이트 파업은 온라인 액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2002년에 들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2002년 3월 3일)되었다. (<http://nocensor.org>) 2002년 4월 22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홈페이지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급거부 운동을 시작하였다. 공



2002년 4월 22일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된 등급거부 선언 기자회견

대위는 2003년 2월, 그동안의 공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2002년 검열백서』를 발간하였다.



## ㉑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결정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 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이와 같은 정부 검열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미러링(mirroring)-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해오는 것-하거나, 폐쇄된 아이노스쿨 사이트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2002년 6월 27일로 큰 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진보네트워킹센터가 1999년에 제기한 것이다. '불온'이라는

기준으로 '정보통신부'라는 주체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불온'을 '불법'으로 바꿨을 뿐 자신들의 규제 권한은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헌논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에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2002년 11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2008년 7월 16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집회 (2001년 8월 17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이어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누리꾼·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8월 <지문날인반대연대>를 구성하였다.(<http://finger.or.kr>) 이들은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1999년 9월),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에 대한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2002년 8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02년 7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2003년 6월) 등의 활동을 벌였다. 2002년 대선을 맞아서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벌였다. 한편,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2002년 8월 27일) 등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작업을 벌였으며, 2003년 3월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를 발간하였다.



2004년 3월 7일 열린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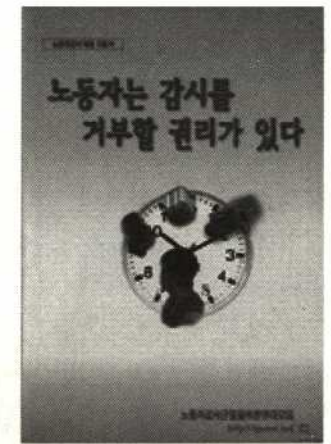


2003년 6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②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http://gamsi.net>) 연대모임에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2003년 노동자 감시 실태 및 인식조사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CCTV, 인터넷, 스마트카드, ERP 등의 감시 사례 및 대응지침을 연구하여 2004년 1월 『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를 발간하였다.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03년 7월 31일)



## 지적재산권 반대운동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운동이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는다. 1994년 창립한 '정보연대 SING'은 '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1999년 2월 '다른과학' 주최로 지적재산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지적재산권 연구회'가 꾸려졌다. 지적재산권 연구회는 2000년 2월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고 현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2000년 3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는 한편, 2000년 7월에는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도서출판 이후)를 발간하였다. 2000년 12월 9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반 입장을 담은 <IPLeft 선언문 Ver 1.0>을 발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 특허 독점의 폐해와 강제실시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

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처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효화시켰고,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는 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2000년 6월 18일 리처드스톨만 초청 강연회



특허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 중 하나가 '의약품(생명) 특허' 문제이다. 특허로 인한 독점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며, 이로 인해 약이 있어도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접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나친 특허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하나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국가위급상황이나 공중의 건강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공급의 독점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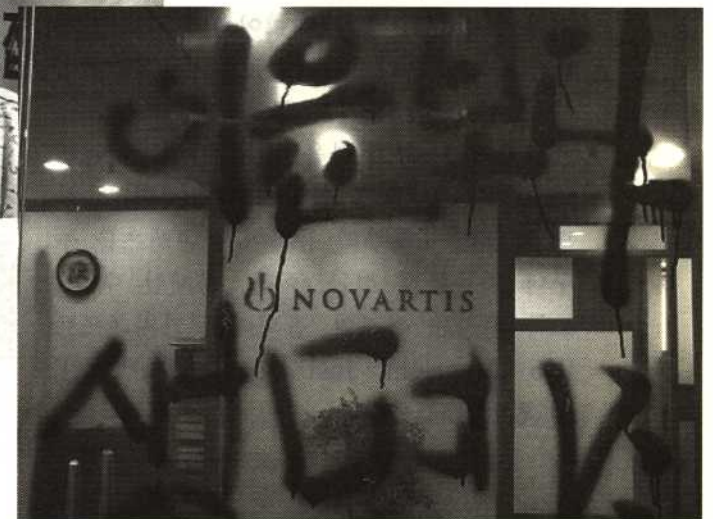
2002년 1월 30일,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기자회견

특허권과 건강권(생명권)의 충돌이 국내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

리벡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한 알에 약 2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약 90만원~15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약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http://glivec.jinbo.net)를 구성하고 약값인하,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강제실시 등을 노바티스와 정부에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도 공대위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 1월 30일, 공대위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글리벡 강제실시는 당시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이었던 남희섭 변호사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특허청을 방문했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허법에 있는 강제실시가 실제로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특허 제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얼마나 권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접거농성,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방문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2003년 2월 정부는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2002년 6월 27일 노바티스 항의방문



## 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 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이슈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규칙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적질? 공유!' 인터넷 사이트(<http://freeinternet.jinbo.net/>)를 구축하고, 2001년 4월에는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 경도된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작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거의 매해 제출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작권 강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저작권법 외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2001년),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권법(2003년) 등 문제 법안에 대응하였다. 한편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사법경찰권법 반대 거리 선전전



## 인터넷 거버넌스

미국의 군사망, 학술망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IP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은 여타 영역과 다르게 정부,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인 ICANN이 설립된 것도 1998년에서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kr 아래의 인터넷 규칙 제정은 민간에서 수행해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 1998년 당시에는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맡고 있었다.

ICANN 설립과 함께, 전 세계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ICANN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KAIST 전길남 교수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에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 앞서 2000년 4월 28일,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ICANN 회의 참가 이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을 알리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KRNIC의 네임분과위원회(Name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했고, 2002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다. KRNIC의 주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으나, 결국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 전국정보운동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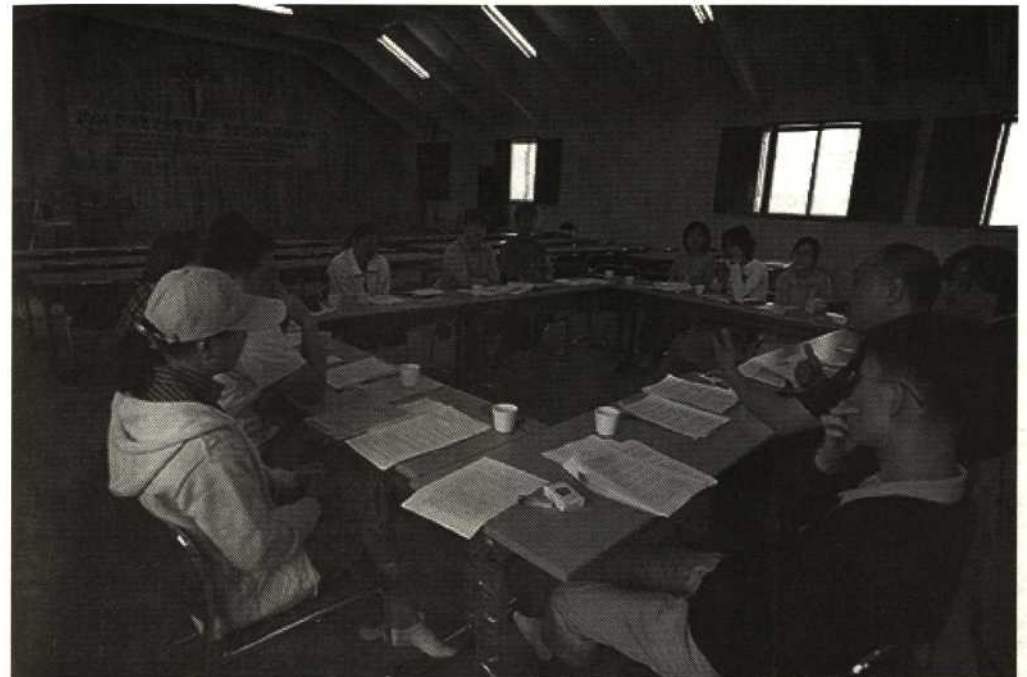
2001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있는 제반 단체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정보통신운동 초창기인 만큼 서로의 현황

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하고, 공동의 사업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였다. 서울과 지역 단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관심이 있을 만한 단체에 전국정보운동포럼 개최를 제안했으며, 행사 내용도 공동주최로 참여한 단체들이 함께 기획하였다. 제1회 포럼은 2001년 2월 10일~11일 개최되었으며, 행사 장소는 전국에서 참여하기 쉽도록 대전으로 정하였다. 제1회 포럼은 △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담당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담당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감시와 프라이버시 (담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 정보화와 사회운동 (담당 : 노동정보화사업단), △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담당 : CSNET), △ 지역의 정보 운동 (담당 : 부산정보연대 PIN) 등 당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그간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평가와 2001년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제1회 포럼의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광주 참@네트워크,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노동정보화사업단, 부산정보연대 PIN,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안산 YMCA,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JOINet,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학생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은 2006년까지 총 6회 개최되었다. 매해 정보운동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2001 전국정보운동포럼(제1회): <http://act.jinbo.net/forum2001/>
- 2002 전국정보운동포럼 : <http://act.jinbo.net/forum2002/>
- 2003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으로 대체, <http://www.wsis.or.kr/>
-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2004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http://act.jinbo.net/forum2004/>
-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http://act.jinbo.net/forum2005/>
- 2006 전국정보운동포럼 : "웹 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 꼬문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http://act.jinbo.net/forum2002/>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NEIS와 정보인권 대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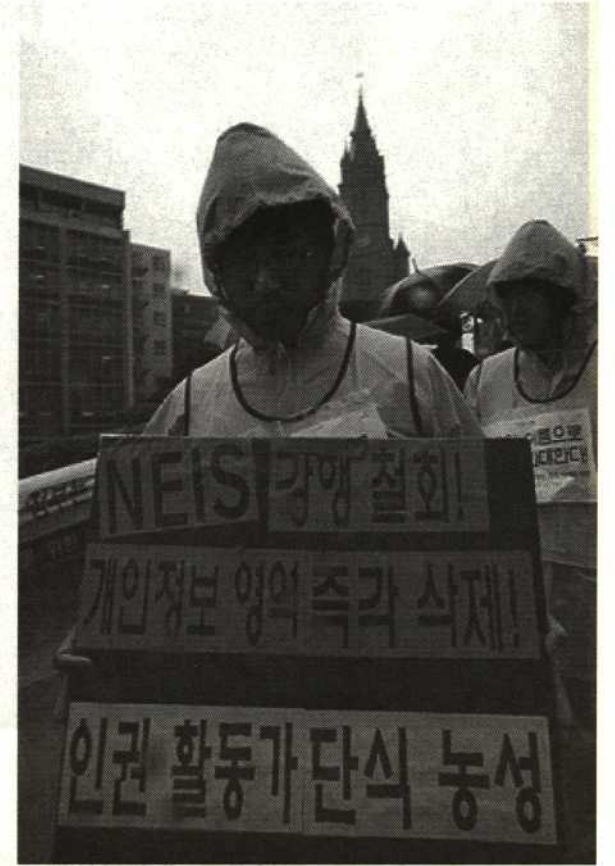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기존에 각 학교별로 관리되던 학생 정보를 각 시도단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NEIS에 입력되는 정보는 학교의 모든 행정 정보, 학생 정보를 포함하여 27개 영역, 6,000여개 항목에 달했다. 교육부의 NEIS 구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한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정보의 집적·통합을 통한 국가통제의 위험성, 교육의 자율성 침해 등 많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NEIS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이미 2002년 9월부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몇 개 항목만을 조정할 채 NEIS 시행을 강행하려고 했으며,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했다. 국회에서 열린 NEIS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전교조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NEIS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NEIS로 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동의거부서 모집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2003년 새로 취임한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NEIS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며, 형식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만들어 NEIS를 강행하고자 하였다.

2003년 5월 12일, NEIS 투쟁의 한 고비가 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과 교원 개인정보 27개 항목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을 바꾸어,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62개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5월 26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3개 개인정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되, 고3 학생의 경우만 임시적으로 NEIS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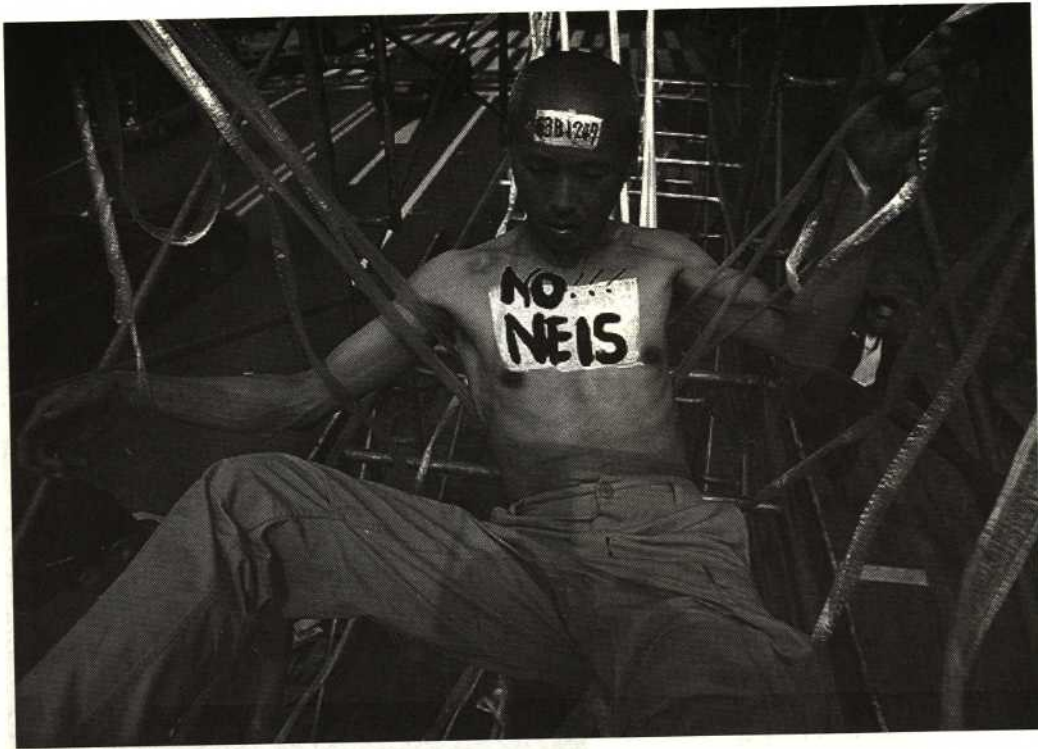
2003년 6월 1일, 교육부는 또 한번 뒤통수를 쳤다. 3개 개인정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뒤엎고, 개별 학교의 결정에 따라 NEIS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이는 각 학교의 역학관계 상 NEIS를 사실상 강행

하려는 시도였는데,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교장과 전교조 선생님들 사이에 NEIS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었다. 6월 18일, 10여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명동성당에서 NEIS에 반대하는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전교조는 6월 21일 연가 투쟁으로 대응하였다. 인권단체들의 단식 농성은 6월 27일로 정리되었지만, 학생·학부모 단체, 인권단체, 교육단체, 당 등을 포함하는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위에는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 등 총 48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원영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손호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용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2003년 7월부터는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대위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구성을 비판하며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외부에서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서울 각지에서 NEIS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매주 개최하는 한편,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대위의 대안이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결국, 2003년 12월 15일,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학사, 입·진학, 보전 등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둘째, 별도의 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두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 합의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 기술적 관리권한을 개별 학교장의 권한 범위에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속하도록 하고,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국가 통제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 학교 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통해 운영한다는 점, 몇 개 학교의 경우에는 이마저 그룹화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NEIS 투쟁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정보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만 정보화가 조망되었던 한국 상황에서 정보화에 따른 인권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NEIS 투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전자정부 사업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 정부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투쟁으로 이어졌다.

## 국제연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초국적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WTO 등 국제 기구의 결정이 각국 정책을 강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에서의 국제연대 필요성 또한 커졌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이나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운동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국제연대 운동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목적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운동과 대중,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내운동과 타국의 운동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진과 연대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하여 국제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국제연대 활동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사회운동의 국제연대 지원 및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2002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연대를 위한 영문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BASE21(<http://base21.jinbo.net>)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공회대 NGO정보센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등 8개 단체들과 함께 국제연대 세미나팀을 운영하였으며, 각 단체에서 생산된 영문 뉴스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자체 영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활동가도 모집하였으며, 10여개의 국제적인 미디어 관련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홍보하였다. 또한 참세상방송국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유통시켰다. 부시방한 반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노동자들의 투쟁, 검열반대 투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페이지를 마련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해외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내 사회운동에 대한 영문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또한 이를 해외로 유통시킬

적당한 통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BASE21이라는 기획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대 전문 단체가 아닌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에서 BASE21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BASE21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단체가 있다면, BASE21을 기증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



base21 홈페이지



##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 이슈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

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Anyer에서 개최된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숍>(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참석했다. 인터독은 전 세계의 NGO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1984년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링크는 인터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의 주제도 이메일, 웹, 리눅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시아링크 국제회의 (1999)

이어 2001년 11월 8일~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중앙대, 숭실대)에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http://asia-ir.jinbo.net>) 이 회의에는 일본 JCA-NET, 필리핀 FMA, 태국의 Focus on the Global South, 진보통신연합 APC 등 16개국에서 20여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이 회의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시아지역 정보통신운동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아직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JCA-NET, FMA 등은 APC의 아시아지역 네트워크로서 200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특히, JCA-NET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이전, 정보연대 SING과의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JCA-NET의 야수다 유키히로(이 분은 일본 노동네트워크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다)는 진보네트워크센터 1호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 진보통신연합 APC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 네트워크이다. (<http://www.apc.org>)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은 각국의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한 APC는 90년대 말 다양한 성격의 정보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비영리 ISP의 연합체일 당시에는 1국가 당 1개의 회원만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해외 정보운동단체로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사회적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전문가들(CPSR) 등 미국의 정보운동 단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APC는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회원 단체를 두고 제3세계적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APC는 2007년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미-캐리비안, 북미 등 전 세계 38개국에 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9년 8월, 일본 JCA-NET의 후원으로 APC의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참가하였으며, 2001년 11월 11일 APC의 회원 네트워크로 정식 가입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APC 총회에서 APC 운영위원(Board member)로 선출되었고, 2005년까지 활동하였다.

APC는 2년에 한번 전체 회원단체가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데, 다음과 같이 총회에 참석했다.

- 2001년 11월 25일~30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김정우, 오병일
- 2003년 10월 6일~15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오병일
- 2005년 10월 4일~12일, 불가리아 소피아, 지음
- 2007년 11월 5일~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종희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로서, 2002년 1월 31일, UN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었다.

WSIS는 각 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가도 허용하였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WSIS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진보적 미디어

정보운동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2년 9월 25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방안> 토론회 개최 이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를 구성하였다. (<http://wsis.or.kr>) 이 네트워크에는 강원민예총,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17대 단체가 참여하였다.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SIS 1차 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방향에 대한 선언과 실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과 실천계획 초안의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3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각 지역별로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



WSIS 2차 준비회의의 보고대회

서 열린 <WSIS : The Asian Response> 회의, 2002년 12월10일~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ia Civil Society Forum>, 2003년 1월 13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WSIS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17일 - 28일 <WSIS 2차 준비회의>, 2003년 9월 15일~26일 <WSIS 3차 준비회의> 등에 참여하여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사회의 입장을 선언문 및 실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WSIS에 참여한 것은 비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정보사회의 방향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초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3년 5월 10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 인프라와 보안, △ 환경과 정보화, △ 장애인정보접근권, △ 문화적 다양성, △ 노동과 정보화, △ 민주적 거버넌스, △ 지적재산권, △ 교육정보화, △ 프라이버시 등 9개 주제 영역의 쟁점 및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워크숍 이후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6월 8일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이후 WSIS에도 전달이 되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

WSIS는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통의 입장을 마련하고, 국제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WSIS 선언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시민사회의 입장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 인적 역량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된 WSIS 2차 회의 및 후속 과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 활동에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WIPO 참관인(Observer)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2006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적지위를 획득하였다.

## 국제회의 참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이후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는 활동가들의 국제 경험을 쌓게하고, 해외 단체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대 사업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과의 관련을 맺지 못하고, 단발적인 참여로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 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안야(Anyer) :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숍(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오병일, 장여영 활동가 참가
- 2002년 9월 15일~19일, 필리핀 마닐라 : APC의 여성정보화지원프로그램(WNSP, Women's Networking Support Programme)에서 여성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GEM(Gender Evaluation Methodology) 회의에 김지희 활동가 참가
- 2002년 10월 7일~12일, 캐나다 몬트리올 : 지구적 공동체 네트워크(Global Community Network) 회의에 오병일 활동가 참가
- 2005년 5월 11일~15일, 영국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 조약(A2K treaty)' 회의에 김정우 활동가 참가
- 2006년 4월 19일~21일, 방글라데시 다카 : APC 아시아 정보통신정책 협의회의(Asia ICT policy consultation meeting)에 김정우, 달균 활동가 참가
- 2006년 6월 6일~8일, 태국 방콕 : 아시아커먼스 회의(Asia Commons Conference)에 김정우 활동가가 참가하여 국내 정보공유운동과 한미FTA 관련 내용 공유
- 2006년 6월 7일~12일, 이탈리아 로마 : Transmission (온라인 영상 공유를 위한 전략회의) 회의에 황규만 활동가 참가
- 2006년 10월 13일~15일, 영국 런던 : Re:Transmission 회의에 달균 활동가 참가
- 2007년 3월 12일~14일, 태국 방콕 : 지적재산권과 정보/지식/문화에 대한 접근 : (동남)아시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옹호의 강화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Information/Knowledge/Culture : Strengthening Pro-Poor Advocacy for Communication Rights in (Southeast) Asia) 회의에 홍지은 활동가 참가
- 2007년 4월 8일~19일, 호주 : APC 아시아 지역회의(APC Asia Regional Meeting) 및 아워미디어(Ourmedia) 회의에 김정우 활동가 참가

2008년에는 해외 단체와 정보통신정책 관련 공동 프로젝트도 시작하였다. APC에서는 2007년부터 매해 주제를 정하여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전 세계적 현황을 책자로 발행하는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보격차'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에서는 매해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백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도, 정책, 이슈가 매해 업데이트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 관련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현재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ONI Asia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지역 모바일 도감청 현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초 한국에서 연구자 회의를 할 예정이다.

2008년 6월 17일~18일에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OECD 장관회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의가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비즈니스 포럼, 인터넷 기술전문가 포럼, 시민사회/노동계 포럼 등 3개의 '이해당사자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관심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the public voice>라는 이름의, EPIC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OECD 장관회의에 가입하였다. 'the public voice'에서는 OECD 장관회의에 시민사회의 입장 문서(Recommendations and Contributions to the OECD Ministerial Meeting of 17-18 June 2008 from Civil Society Participants in the Public Voice Coalition)를 제출하였으며, 6월 16일 시민사회/노동계 포럼(Civil Society - Organized Labour Forum)을 준비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the public voice에 참여하여, 입장 문서 논의 및 포럼 준비를 함께 하였으며, 시민사회/노동계 포럼에서 장여경 활동가가 발표하였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16일, 시민사회/노동계 포럼 회의장 앞에서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 정보통신 정책의 후진성과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폭로하였다.

## 진보네트워크의 의미

진보네트워크의 운영은 사회운동 내에서 독자적인 물리적 기반, 즉 독립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일차적인 중요성은 역시 정부나 기업의 검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시한 후 줄곧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아 왔다. 수사기관이 혐의사항도 없이 아이디어 'marx'나 '좌파'를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검열기구는 진보네트워크 내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요구들에 응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가 이런 감시와 검열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운동의 힘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온 독립네트워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요구가 강제적인 법적 요구도 아니고 위법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전통이 강한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업통신망은 이런 요구들을 거절하기 힘들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협조요청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8년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서버에 IP주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든, 불법적인 방식으로든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특히 국가정보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버에 IP주소 등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진보네트워크센

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의 반발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8년 시작된 18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둘째로, 사회운동 친화적인 독립 네트워크 기반은 사회운동 진영이 상업적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풍부하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보달력과 같이 사회운동의 요구에 특화된 서비스, 메일링리스트처럼 수익성이 없어 상업적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상업적 웹호스팅 업체에서 서비스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경우 진보네트워크가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퇴청소년 커뮤니티라며 폐쇄시킨 아이노스쿨이나 음란성을 이유로 폐쇄된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 군대반대사이트(<http://non-serviam.org>) 등에 호스팅, 백업, 도메인 포워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혹은 특정한 사회 이슈를 위해 개설되었는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강제 대상이 된 경우, 해외의 진보단체들에 요청하여 해외 미러링(mirroring)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KBS 강철구 성폭력사건 공대위 홈페이지(<http://antikcg.jinbo.net>)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독립네트워크의 존재 의미는 단지 '기술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독립네트워크보다 대규모 상업적 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비용도 저렴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는 그 안에 수많은 문화적, 정치적인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은 문화적, 정치적인 맥락을 포착하고,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게시판 운영원칙'의 제정운동이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은 정부의 검열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시민사회단체나 노조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아무런 원칙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비록 정부나 사측의 농간으로 짐작되는 게시물이 있었을지라도, 때로는 회원(조합원)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의 표현을 차단하는 것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게시판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00년 11월 29일, <노동미디어 2000 주간: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에서 <사회운동

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2004년 10월 4일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발표되면서 홈페이지 및 블로그 콘텐츠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자는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카피레프트 캠페인이 말 그대로 '정보를 공유합니다!'라는 선언이었다면,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이어폭스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웹접근성 지침'을 홍보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들도 이미지만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깨져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영상 포맷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보네트워크센터 내에서의 토론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에 있다. 참세상 방송국은 설립 후 삼년 간 '리얼 플레이어' 포맷만을 채택해 왔다. 리얼 포맷은 윈도 뿐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윈도 미디어 포맷은 초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부속되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으로서, 윈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과 편리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과 편리함은 독점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참세상 방송국은 의식적으로 윈도 미디어 포맷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윈도 미디어 포맷의 독점력이 커지자 참세상 방송국에도 윈도 미디어 포맷을 제공해 달라는 이용자 요구가 높아졌다. '리얼 플레이어'는 별도로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지만, '윈도 미디어'는 윈도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리얼 플레이어' 포맷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불편을 호소하였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윈도 미디어 포맷을 채택하면서 리얼 포맷을 고수하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2002년 여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 끝에 리얼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들은 기술의 실용성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했다. 리얼 포맷을 고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윈도 미디어 포맷에 비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단순히 보는데 불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면, 진보적 영상을 만드는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술의 정치성에 대해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지 않으면 독점적 기술의 권력은 커져갈 것이고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의 선택폭은 매우 좁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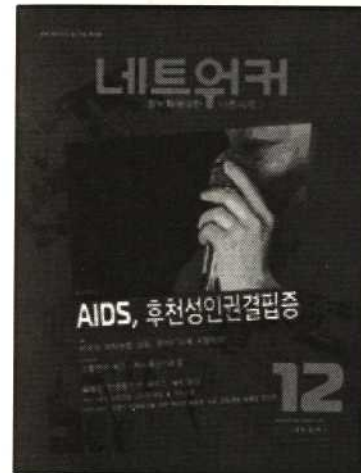
## 월간 <네트워커> 발행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회원 소식지를 발간해왔다. 그리고 정책실이 신설된 2000년 6월, '네트워커(NETWORKER)'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회원 소식지를 재발간하였다. 회원 소식지 '네트워커'는 2002년 12월 까지 총 22호 발간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비단 회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통신 정책 잡지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 잡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통신 기술, 정보산업 등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었으며, 정보화의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잡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정기간행물 월간 <네트워커>(http://networker.jinbo.net)를 창간하게 된다. 네트워커는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표방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40호를 발간하였다.

월간 <네트워커>는 독자적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 및 기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과 별도로 <네트워커> 정기구독자를 모집하였으며, 일반 서점 유통망을 통해서도 배포하였다. 초기 네트워커 편집위원은 강남훈(한신대 교수), 김철준(법무법인 다산 대표), 김학원(도서출판 휴머니스트 대표), 김현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남희섭(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박윤정(한국인터넷정보센터 네임컴 위원),



신기섭(한겨레신문 기자),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 이은우(변호사), 최인화(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로 구성되었다. 이후 최세진(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김익용(IIC 대표), 이지선(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조동원(영상미디어센터정책연구실장), 김도형(변호사), 양희진(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등이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월간 <네트워커>는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정책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비단 운동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들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조명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쟁점은 아닐지라도, 장애, 학교, 문화, 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보화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를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국 활동과 월간 <네트워커> 발행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이 정책 활동과 함께 '기자'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양자 모두에 부하가 가중되었다. 월간 <네트워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데 급급했으며, 구독자 모집 사업, 광고 조직화, 월간 <네트워커> 사이트 활성화 등의 사업은 매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활동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2006년에는 '네트워커 전담 사업팀'을 두고자 했으나, 활동가 휴직·사직 등으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갈수록 네트워커 발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역시 가중되었다.

월간 <네트워커>는 2006년 12월 40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http://acton.jinbo.net) 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진 액트온과 계간지 액트온 발간으로 전환하였다.

## 월간 <네트워커> 총 목록

- 1호 : 인터넷 강국, 공포만 늘어간다
- 2호 : PC방, 오락실에서 벗어나라!
- 3호 : 16대 국회,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 4호 : 경영정보시스템의 뒷면
- 5호 : 누가 인터넷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 6호 : 미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 7호 : 웹을 자유롭게 하라!
- 8호 : 4.15총선, 인터넷과 만나다!
- 9호 : 정보인권과 여성
- 10호 : 제발 멈춰라 스팸!
- 11호 : 생체정보는 안전한가
- 12호 : 포털은 권력이다
- 13호 : 교육부 e-learning, "왜 이러니?"
- 14호 : 사회단체 정보통신정책 들여다보기
- 15호 : 대학, 정보화 ing
- 16호 : 인터넷 종량제 허와 실
- 17호 :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 18호 : 의료정보화와 정보인권
- 19호 : 네트워커가 바라본 2005년 정보사회
- 20호 : 저작권법 앞에 모든 국민은 범법자
- 21호 : 손안의 TV DMB, 그 환상과 현실
- 22호 : 민주주의의 실험, 전자투표
- 23호 : 인터넷종량제와 KT 민영화의 함수관계
- 24호 : 관계를 통한 관계의 확장, 소셜 네트워크
- 25호 : 대안인증은 인증하지 않는 것이다
- 26호 : 사이버 인권침해, 네티즌은 울고있다
- 27호 : 미디어난개발, 공공성은 어디에?
- 28호 : 저작권, P2P에 한판승?
- 29호 : 뜨거운 감자, 아이템 현금거래
- 30호 : 다시 웹을 사고한다 웹2.0
- 31호 :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실태

- 32호 : 선거인터넷실명제 시행임박!
- 33호 : 주류를 위협하는 대안적 소통의 모색
- 34호 : 게임등급제 논란 : 산업발전 vs 청소년보호?
- 35호 : 오픈웹, 닫힌 전자정부를 열어라!
- 36호 : 형사사법통합망, 제2의 네이스?
- 37호 : 특허청은 특허장사꾼인가?
- 38호 : 포털뉴스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39호 : 의료정보화의 그늘
- 40호 : AIDS, 후천성인권결핍증

## 진보적 커뮤니티의 구축

2004년을 맞으면서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난 5년 동안 '사회운동의 독립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점차 독자 서버를 운영하는 사회운동 내의 단위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의 기술적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또한 독자 서버를 운영할 수 없는 단체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크의 역할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또한, 단순한 기술적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게시판 운영원칙, 홈페이지 카페레프트, 스트리밍 서비스 포맷에 대한 원칙 등 기술정치적 방향을 제시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했다. 다만, 정보운동의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정보운동 담론의 확산 및 활동가 재생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민중 투쟁의 지원 단위로서의 인식을 확보했다. 이는 참세상방송국 활동을 통해 '민중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온라인 소통공간'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짚을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PC통신에서 웹 환경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웹-BBS 연동과 참세상 무료화로 대응하였으나, 이후에도 웹 커뮤니티인 '참세상 공동체'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웹 연동이 기술 활동가의 인력 부족으로 2~3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시기적, 기능적으로 대응이 매우 늦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을 시작함으로써 굳이 진보네트워크 내에 커뮤니티를 개설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더불어, '진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보적 소통, 담론의 공간을 만들려는 비전과 기획' 자체가 부재했다. 초기 진보네트워크는 '사회운동 포털'을 선언하였으나, 1세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KPD) 이상으로 진전하지 못하였다. 주요 포털 사이트처럼 웹 기반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진보네트워크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 자체가 부재했다. 사실 이러한 기획과 집행을 위한 적절한 역량도 투입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역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방적인 웹 환경에서 굳이 진보네트워크로 커뮤니티를 수렴하는 것보다는 개별 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여 커뮤니티를 분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사이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분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거치면서, 온라인 공동체 구축에 대한 과거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진보적 담론과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으로서의 진보네트워크의 위상을 복원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회운동 단체들(특히 민중운동, 소수자운동, 소규모 단체 등)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운영 역량의 부족하여 분산·고립화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엮어 줄 '관문'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어느 정도 정치세력화된 개혁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 등에 비해, 민중운동, 소수자 운동의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적 입장을 가진 인터넷 언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갈수록 상업 사이트에 의존적인 개인의 인터넷 환경(메일, 메신저, 블로그 등)을 진보적인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중반을 전후하여 개개인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다음(Daum), 네이버 등 소수 포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2004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

성'을 핵심적인 사업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 기본적인 기술적 서비스가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보운동의 뉴스·정보·자료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검색 기능의 강화, 진보적 개인과 단체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진보 블로그 서비스, 진보 공동체 내 개개인들의 안전한 소통을 위한 진보 메신저, 사회운동 뉴스들의 편리한 관리를 위한 뉴스저작도구 등의 개발·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진보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참세상 방송국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진보네트워크 Revolutions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사업기조의 설정에 따라, 2004년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은 '진보네트워크 Revolution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CGI 솔루션'(회원 인증 및 관리, 게시판, 달력 등 홈페이지에서 활용되는 기능을 통합한 도구), 블로그, 뉴스 도구의 개발, 검색어 방식의 검색을 위한 인덱싱 기능 등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이 증가하고, 홈페이지마다 소통을 위한 게시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PC통신의 CUG와는 달리, 인터넷 자유 게시판은 더 이상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 스팸이나 알바(?)들에게 점령당하기 일쑤일 뿐 아니라, 회원들이 게시판 소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보다는 해체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의 커뮤니티 전략, 즉 블로그를 통한 소통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회원(이용자)들은 블로그라는 공간에 정착하고, 각각의 방은 창문을 통해 광장으로 연결되는 모델이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원들의 블로그에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광장으로 끌어오는 역할만 하면 될 것이다.

각 단체들에게 '통합 CGI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한 것은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참세상 공동체'와 각 단체 홈페이지 사이의 경계를 없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진보네트워크는 웹메일, 블로그 등 개인 서비스 운영에 집중하고, 커뮤

니티의 운영은 각 단체에 이양하려는 방향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진보네트워크 Revolutions'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지연되었고,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달성되게 되었다.

2004년 9월, 통합인증 및 웹기반으로 참세상 공동체를 개편하였다. 또한 '통합 CGI 솔루션'의 일부로 '참세상 공동체 배포판'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진보연대(<http://pssp.org>), 인권운동사랑방(<http://sarangbang.or.kr>), 노동넷(<http://nodong.net>) 등에 설치하였다. 참세상 공동체 배포판 V1.0은 2005년에야 완성되었으나 이를 배포하기 위한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진보 메신저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참세상 방송국은 2005년 <민중언론 참세상>으로 독립하였다.

진보·사회운동 진영의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계획은 폐기되었다. 검색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검색 엔진'이 필요한데, 서버 1대당 10만건 정도의 데이터만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의 경우에도 2500만원 정도의 구입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재정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포털 사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검색엔진의 이용과 더불어 검색 서비스를 위해 수십 명의 인력이 수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검색 중심의 포털이란 대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며, 진보네트워크가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호스팅 단체들과 블로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검색어(인덱스) 중심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진보네트워크의 전략은 2004년 7월 시작한 블로그 서비스, '진보 블로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진보 블로그

진보 블로그(<http://blog.jinbo.net>)는 2004년 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4년 7월 8일 데모판 오픈, 같은 해 7월 27일 정식 오픈하였다. 진보 블로그는 거의 자원 활동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2004년 말까지 약 700개 정도 개설된 블로그 수는 2007년 말 3000개로 증가하였으며, 매일 포스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블로그에 사진 등을 직접 올릴 수 있는 '모블로깅' 기능, 여러 명이 한개의 블로그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팀블로그' 기능,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이후에도 편집기 기능 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블로그 Top 페이지

진보 블로그 Top 페이지에는 주목할만한 블로그들의 글로 이루어진 '블로거진'이 매일 편집되고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블로거들이 쓴 글들이 트랙백으로 연결되는 '트랙백' 서비스를 통해 특정 사회이슈에 참여하거나 논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보 블로그는 일정하게 진보적인 담론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블로그에 올라오는 포스팅, 논쟁이 되는 이슈, 블로거 간의 소통 문화 등에 있어서 타 블로그 서비스와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진보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단체의 공식 입장' 뒤에 묻혀있던 활동가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블로그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구들이 단지 하나의 기술적 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소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트랙백'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활동에 대한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추리 사태에 대한 릴레이 선언, 메이데이에 즈음한 블로그 찌라시 만들기,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주로 진보 블로그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진보 블로그가 폐쇄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 블로거가 아닌 블로거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블로그를 어디에 개설했든 상관없이 진보적 담론이 유통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메타 사이트인 '플로그' (<http://plog.jinbo.net>)를 개발하였다. 플로그는 2007년 4월 14일 베타오픈을 거쳐, 같은 해 5월 16일 정식 오픈되었다.

## 민중언론 참세상 설립

2000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이 등장하였다. 1998년에 창간된 <만지일보>를 필두로, 1999년 <대자보>, 2000년 <오마이뉴스>, 2001년 <민중의소리> 등 다양한 전문 인터넷 언론 혹은 인터넷 방송국들이 창간되었다. 인터넷 언론은 주류 언론의 오보나 왜곡을 비판하거나, 주류 일간 언론에 비해 실시간으로 사건 현장을 보도할 수 있다는 점,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다는 점, 사진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등에 업고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인터넷 논객, 시민기자, 기사에 대한 리플 등의 형태로 인터넷 언론은 이용자의 참여를 높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언론이 사회적인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은 2002년을 경과하면서 이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효순 이·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노사모' 열풍이 일어난 배경에는 진보적 인터넷 언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진보진영 내 새로운 매체 건설을 위한 워킹그룹 논의

2002년 대선 이후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참세상방송국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험을 해왔고, 참세상 뉴스를 통해 진보진영의 뉴스 서비스를 하는 등 준 언론 매체로서의 시작은 타 인터넷 언론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 중 하나, 혹은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콘텐츠의 하나였을 뿐,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을 경과하면서는 오히려 시류에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주류 인터넷 언론이었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 소위 '개혁'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인터넷 언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통합된) 참세상 방송국이 그러한 진보 인터넷 언론 설립의 기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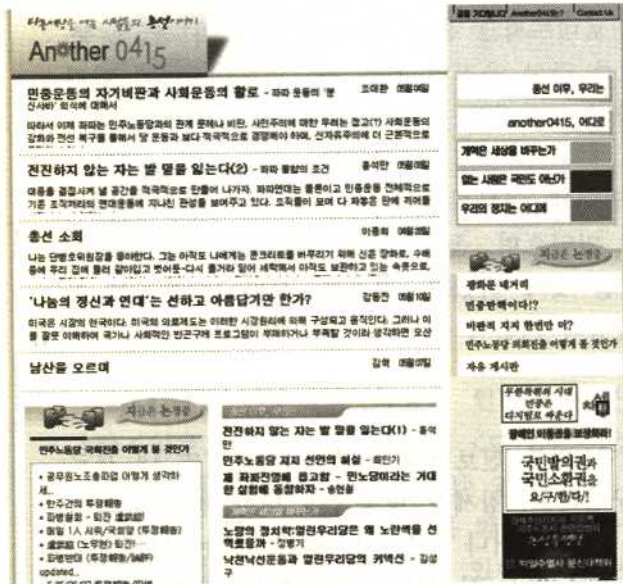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03년, 참세상 방송국은 외부 진보단체와 함께 '진보진영 내 새로운 매체 건설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참세상 방송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 매체 설립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1년여의 워킹그룹 논의는 별다른 결론을 맺지 못하고 해소되었다. 이는 당시 참세상 방송국 활동가들이 언론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일천하였고, 독자적인 사업모델 등 새로운 매체의 구체적인 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세상 방송국의 독립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미디어 참세상

2004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요 활동기조로 '진보포털'의 재구축을 통한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을 내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검색 등 기술적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진보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꺼리(뉴스, 컬럼 등)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세상 방송국의 활동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에 참세상 방송국의 신입 활동가가 대거 충원되게 된다.

2004년에는 4월 15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참세상 방송국은 '다른세상을 여는 사람들'과 총선 이슈사이트를 공동 준비하였으며, 3월 15일 another0415.net을 오픈하게 된다.



another0415.net

총선 이후 참세상방송국은 another0415.net과 통합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6월 7일 '미디어참세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를 개편하였다. 영상팀과 취재팀을 편성하고, 9월 1일에는 '시민기자'와 비슷한 개념의 '뉴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디카 사이트 등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12월에는 '피플파워'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민방송 RTV를 통해 송출하기도 했다.



시민방송 RTV를 통해 송출된 피플파워 프로그램

## 2005년 민중언론참세상 설립

2004년 미디어참세상은 안정적인 편집, 기사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2005년 진보네트워센터는 미디어참세상을 '전문적인 진보적 인터넷 매체'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진보네트워센터 '미디어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다. 첫째는 진보네트워센터라는 틀 내에서는 '미디어참세상'이 명실상부한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 타 인터넷 언론은 '전문' 인터넷 언론이다. 그러나 '미디어참세상'은 진보넷 포털의 '미디어 섹션'일 뿐이다. 이는 '미디어 다음'과 같이 여러 언론 매체의 관문 역할을 하면 모를까,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전문 인터넷 언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당시 미디어참세상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섹션'보다는, 독자적인 진보 뉴스를 생산하는 '전문 인터넷 언론'을 지향하였다.

둘째, 네트워크로서의 진보네트워센터와 '미디어참세상'의 정치적 지평이 같지 않다. 네트워크로서 진보네트워센터의 정치성은 비영리적 시민사회운동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거나, 혹은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미디어참세상은 언론으로서 (비록 당처럼 강령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치적 지평이 다른 사업 영역을 한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서로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서로 다른 활동 영역을 하나의 조직에서 포괄함으로써 조직 내 소통에 장애로 작용한다. 조직이 비대화되면 아무래도 소통의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진보네트워센터 초창기에 비해 각 국간의 공통분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진보네트워센터는 미디어참세상을 진보적 인터넷 언론으로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진보네트워센터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서비스 및 정책 생산 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물론 이는 이미 2003년에 '워킹그룹'을 구성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다. 다만, 2003년에는

독립할만한 조직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2005년 들어서면서는 기자도 확충되고, 편집 및 기사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단체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005년 3월 각계 인사 83명의 '새 민중언론 창간 제안' 등 창간 준비 작업을 거쳐, 2005년 5월 1일 <민중언론 참세상>이 창간되었다. (<http://www.newscham.net>) 민중언론 참세상은 창간제안문에서 △ 변혁의 발을 갈고, 씨뿌리고, 물꼬를 트는 민중언론, △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지배담론과 논리와 주장에 맞서 싸우는 언론, △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소수자의 언론을 표방하였다. 또한 민중언론 참세상의 위상을 △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 대안 담론을 선도하는 언론, △ 투쟁하는 민중의 생활매체, 정치매체, △ 미디어의 공공영역을 개척하는 언론, △ 변혁적 민중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언론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 5월 12일, 민중언론 참세상 창간발기인 대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중들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입안해왔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UCC 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검열하도록 요구하였다.

###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정보통신부는 7월, 법제화를 철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2004년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2005년 초, 인터넷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  
제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  
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안 초안을 공개했다.

2006년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  
로 불렀다)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  
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03년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싸움을 전개해왔  
지만, 결국 이 법안은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네이버, 다음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 사이트, 오마이뉴스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판도라 TV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UCC 사이트 등 2008년 현재 27  
개 사이트를 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실명제는 개별 커뮤  
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실명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되는 실명제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명  
확인에 쓰이는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애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  
버시를 침해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긴  
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는 실명제 의무화 대  
상을 현재 27개 사이트에서 178개로 확대하는 정  
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배너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운동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대응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  
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  
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  
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로부터 시작된 반대 운동은 직접 당사  
자인 인터넷 언론사로 확대되었다. 2004년 2월 17일,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  
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2월 19일부터 3  
차에 걸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이 전개되었다. 한편 2004년 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은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 통과 직후,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인터넷신  
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  
한 불복종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4년 3월 18일,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  
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  
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그리고 누리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의 대리인으로는 김춘희, 김철준(이상 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김석연(법무법인 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등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2005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선거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사 공동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진보적 언론사들(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민주통신,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성남일보,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프로메테우스, 참소리, 참말로)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하였으며, 불복종 선언을 한 진보적 인터넷 언론사 중에는 <민중의 소리>만이 실제 실명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실명제 반대운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 11월 22일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을 맞아 인터넷 언론들(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은 또 다시 인터넷실명제 거부에 들어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각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로부터 링크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하는 방식(덧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다!)으로 실명제 거부운동을 지원하였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실명제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2004년 4월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용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비판하며, 2007년 7월 24일 홈페이지(<http://freeucc.jinbo.net>)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 4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3명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송호창 변호사가 맡았다.



## 계속되는 정부의 검열

2002년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임시조치를 악용하여 기업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인 차단이 급증하였다. 2007년 6월 11일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8월 14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당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007년 7월 18일, 민중사회단체에 올라온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으며, 8월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였다.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북한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렸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등은 2007년 7월,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구성하고, 정부의 삭제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는 해당 단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이 사안이 아니라,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계

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없어지고, 그 기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게 되었다)의 삭제 요구 이후, 2008년 7월 16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2008 촛불시위와 인터넷 통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하였고,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08년 5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는 촛불로 가득찼고, 이 과정에서도 인터넷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음(Daum) 아고라로 대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 경찰의 폭력 현장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폭로되는가 하면, 촛불 시위의 전략이 토론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신당의 칼



촛불시위 기간 동안 민중언론 참세상은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였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를 지원하였다. 사진은 생중계 중인 민중언론 참세상.

라TV 등 인터넷 언론을 통한 생중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캠코더와 노트북을 들고 무선 인터넷과 아프리카(afreeca)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생중계를 하기도 하였다.

###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의 압박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은 이에 화답하여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008년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거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5월 17일 동맹휴업'을 제안한 19세 청소년을 학교 영업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이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겨레21에 의해 밝혀진 정부 회의 문건(2008년 5월 9일, 부처대변인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이 꾸려지는가 하면,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세부조사를 통보받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포털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대통령을 비하하는 언어를 쓰지 말라며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는 등 정치적인 심의를 하였다. 심의위는 이명박을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촛불시위의 의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언론탄압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왜곡된 기사를 써대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실제로 신문사의 광고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파급력이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 58개를 불법적인 '영업방해'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심의위 결정 후 직접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비슷한 다른 게시물들도 광범위하게 삭제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누리꾼에 대하여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 관련 활동을 벌인 누리꾼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관련 기업에 권유하는 한편(2008년 7월 15일 농심 기자회견), 7월 8일에는 관련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15일에는 가택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급기야 검찰은 2008년 8월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들을 구속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이던 커뮤니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지면 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8월 7일에는 심의위 결정에 대해 민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 사이버통제법 강화

수사기관과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한 인터넷 통제에서 나아가, 정부는 인터넷 여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법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 초 발생한 옥션 해킹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남용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동시에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종합대책은 2008년 9월 1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제124조 제2항)하는 한편, 임시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포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을 사적 검열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9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업자를 기존 37개에서 178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법령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전체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2008년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 규탄 기자회견

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경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사이버모욕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요지는,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2008년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히 이래,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8년 10월 고 최진실씨 자살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한나라당은 장윤석 의원의 형법 개정안(10월 30일), 나경원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1월 3일)을 통해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판하였으며, 11월에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사이버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어쩌면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타인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성과 투명성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감시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시받는 자만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정보사회의 감시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그것은 감시 관계가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처럼 노골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들의 행위가 규율화된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 채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강요되는 규율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감시와 통제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정보사회의 확장 속에서 개인정보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생체 인식이나 스마트 카드와 결합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감시를 위한 제반 장치들은 '효율성'과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명분'을 갖고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다양한 기술,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1997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반감시,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의제 역시 다양화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목적별신분등록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단지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운동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 개최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2003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함께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해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입법청원 운동을 준비하였다.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은 2003년부터 준비해 온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2004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권한, △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04년 12월 9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하였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법안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맡게 하였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05년 4월 이은영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하고, 같은 해 7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용으로 재발의하였다. 2005년 10월 17일,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되었는데, 국회에 발의된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구체적인 보호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발의 의원의 소속 상임위와 다르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행자위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심의는 계속 지체되었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매 국회 회기 때마다 행자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논의를 촉구하였으나, 2006년 여름에는 행자위 의원들마저 교체되기도 하였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06년 11월 국회 미래연구포럼의 변재일, 진영 의원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통합안 제정을 위한 협의모임을 제안하였다. 이 협의모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 측에서는 YMCA,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이은우 운영위원, 오병일)에서 참가하였다. 3차례의 협의 모임을 통해 통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06년 11월 21일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합안은 시민사회단

체의 입장인 노회찬 의원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서 후퇴한 안이었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통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었다. 그나마 이 통합안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행정안전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17대 국회에 올라온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최소한의 공통점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조차 포함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을 비판하며, 이전에 발의했던 노회찬 의원안을 재검토하여 18대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다.



## 지문날인 반대 및 주민등록법 개정 운동

### 지문날인 반대운동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영역만 살펴봐도 △ 관공서의 무인민원서류발급, △ 학교, 학원에서의 수업일수 확인, △ 대학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 대학건물을 포함한 건물 무인출입 관리 등에 지문식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요지의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운동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4년 8월 18일 개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미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준비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 입법운동은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말았다.

### 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2005년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한층 높였던 한 해였다. 2005년 초에 3회에 걸쳐 월간 <네트워커>에 연재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는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발표했고,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을 제시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팀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2006년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6년 초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리니지'에서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시스템의 폐기,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미진한 대책은 관련 피해를 반복해서 양산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옥션에서 회원 1천81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업체 2위인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08년 5월 2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하였다. 그

러나 행정안전부는 현행법률 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망법 및 주민등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 전자주민카드 재도입 시도에 대한 대응

제2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는 새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에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9월 22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IC 기반의 스마트카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6년 4월 17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현행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바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애초 계획은 2009년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의 후속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활동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

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숍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출생, 혼인, 사망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2005년 12월 28일에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2006년 3월 3일에는 정부(법무부)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결국 2006년 4월 26일, 법사위 대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률안은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호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통신비밀의 보호운동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 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

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음메이지 호스팅 받는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생방송 2007년 04월 12일 15:12 [추천](#)

관악동작학고문양위원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단  
 푸른영상 김동현 감독\_유대래 감독\_윤장현 감독\_장철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지영 감독  
 (사)디지털노동운동학자센터·민주화추진한국교수협의회·상업보건의료·삼미브레는음·  
 역수일리터럴전 이베디·연관운동시방망·광혜연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연합·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종교산업노동자교육연구소·진보저널리스트모임·  
 귀머울방송제작단·학교급식법개정조례제정추진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연결센터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운동 블로그

결국 2005년 5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같은 해 6월 28일 입법 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12개월 동안(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기록 보관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웹호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서버 로그에 IP주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려 시도했다. 2007년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업자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최대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을 통해 법사위를 삭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상정하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속 계류되었으며, 2008년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을 내어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18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2007년 4월 3일)



## CCTV 등 감시에 대한 대응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2002년 12월 5대의 CCTV를 설치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로 도입하였다. 또한, 편의점, 지하철, 목욕탕, 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CCTV 설치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2004년 강남구는 구 전역에 272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이 CCTV는 "360도 회전 기능·22배의 줌기능·실시간 수배자 얼굴과의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에 발표한 정책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 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5년 6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같은 해 9월 강남구 CCTV 설치 확대 비판, 2005년 10월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부는 2006년 10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는 2007년 12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간 CCTV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 영역의 CCTV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6일 경찰청은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쳐 불법적인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8년 5월 19일,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다.



##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대응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응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채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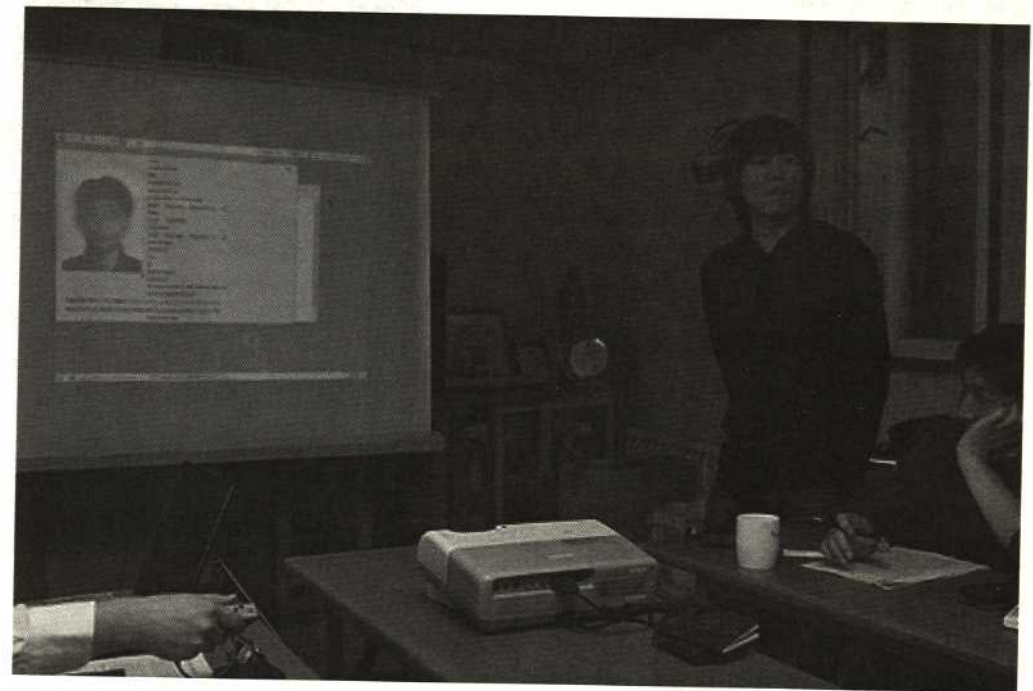
한편, 법무부는 2005년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2006년 8월 1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진보네트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2006년 11월 21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검정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이 법안은 17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였고,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18대 국회에 이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 생체(전자) 여권에 대한 대응

2007년 외교통상부는 지문을 수록함과 동시에 여권을 전자화하는 생체(전자) 여권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생체여권 대응팀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였다.(<http://biopass.jinbo.net>) 그러나 2007년 9월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2008년 2월, 지문수룩만 2년 유예된 상태로 국회 통의통위를 통과하였다.

이후 생체여권 대응팀은 2008년 4월부터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

발급 선언!'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4월 22일 기자회견 및 재발급신청 행동을 하였다. 또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 직후 9월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RFID 리더기와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들을 모니터로 읽어내는 시연을 통해 전자여권이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보안이 취약하고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생체여권 대응팀은 계속적으로 지문 및 주민등록번호의 삭제, 국민들의 여권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RFID 리더기를 통해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 빅브라더 캠페인

2005년 11월 22일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2005 빅브라더상 행사>가 개최되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http://www.bigbrotherawards.org>) 2005 빅브라더상 행사는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 행사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행사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 혹은 변경되거나, 정부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공동 주관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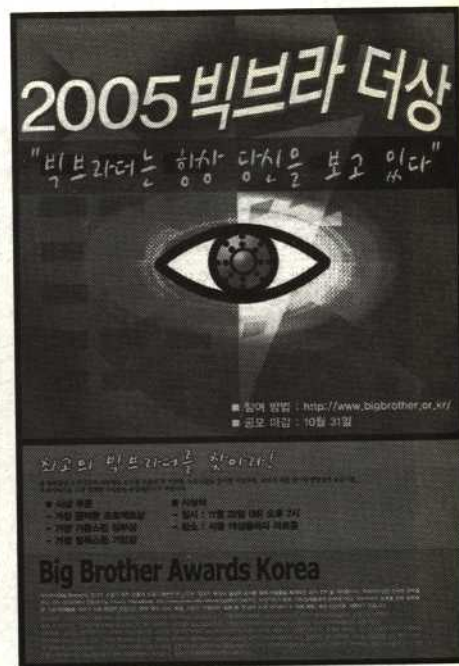
### ■ 공동 조직위원장

김정현 (문화연대 공동대표)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이종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창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2005 빅브라더상 포스터

### ■ 조직위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권영근 (농어촌 사회연구소 소장), 김기중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서울대 교수),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철준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 서이종 (서울대 교수), 우지숙 (서울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은우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 이형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2005년 10월 11일,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를 통해 후보 공모에 들어갔으며, 10월 31일까지 추천을 받은 결과,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와 관련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특기할 것으로는 3개 부문 전체에 걸쳐 총 7개 후보가 CCTV와 관련하여 추천이 이루어져 CCTV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와 관련하여 3개 후보가 추천되고 민원인에 대한 CCTV 감시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추천되는 등 노동자들의 CCTV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검경의 유전자DB 구축 사업, 대학들의 지문-정맥인식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안들도 빠짐없이 추천되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가 인터넷 실명제 추진 발언을 이유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후보로 추천되는 등 예상 외의 후보들도 일부 추천되었다.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구조적 원인)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정보통신부 (거듭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시도)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 자행)

또한 추천된 후보는 아니었으나, 2005년 정국을 떠들썩하게 해 온 X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특별상인 “내 귀의 도청장치”상이 주어졌으며, 웹사이트에서 실시된 네티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 계획에 네티즌 인기상이 주어졌다.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를 받은 주민등록번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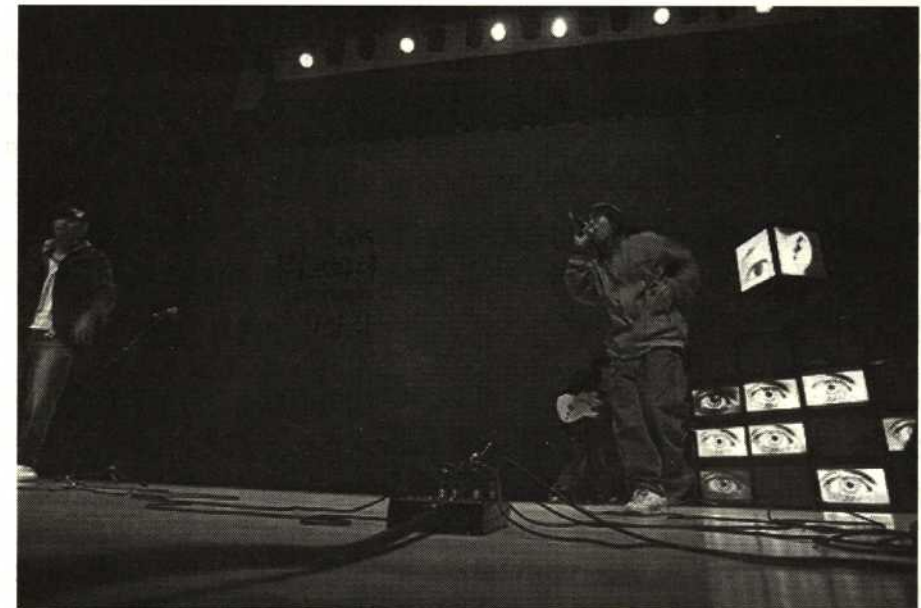
빅브라더상 시상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행사장을 순찰하고 있다.

시상식은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폰트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수상자로 분장한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일본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토시마루 오구라 교수가 참석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사안들을 소개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기획사진전 <빅브라더의 눈>이 열렸다.



<빅브라더의 눈> 기획사진전

한편, 비폭력 저항과 평화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행동하는 랩음악 팀인 더 실버라이닝(the silver lining)은 시상식 공연을 위해 빅브라더곡을 작사, 작곡, 공연하였다.



더 실버라이닝의 빅브라더곡 공연

##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비판 및 정보공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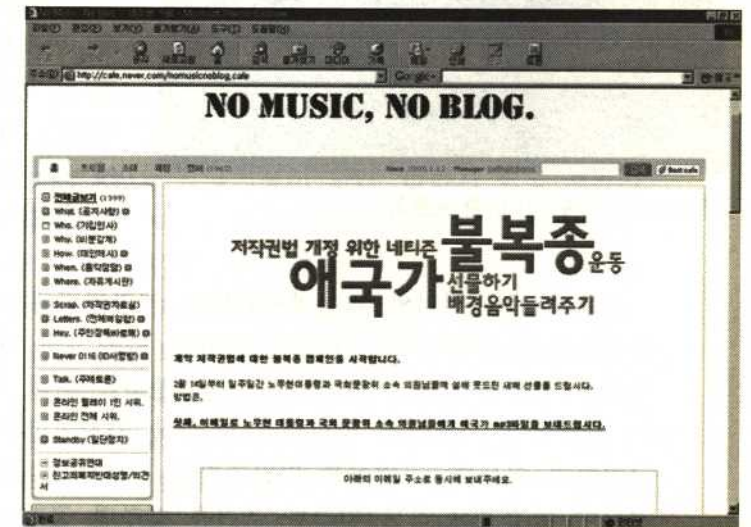
### ② 디지털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2000년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로써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었다. 2001년에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디지털 도서관의 공정이용 범위 축소 △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성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저작권법이 '창작'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투자'를 보호하는 법임을 선언한 것

이다. 도서관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책의 부수로 한정하고, 도서관 간의 자료전송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도서관을 무력화시켰다. 해당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등은 성명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2년 8월 28일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결국 2003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5년 초 인터넷 공간은 떠들썩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에 올렸던 배경음악을 내리고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다. 2004년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1월 17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자에게 전송권이 주어져, 이번 법 개정 자체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누리꾼들에게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05년에야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이는 누리꾼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 마라'(http://cafe.daum.net/nethim), 'No Music No Blog'(http://cafe.naver.com/nomusicnoblog), '인터넷을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http://ipleft.or.kr/antilaw) 등 누리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FreeBGM.net)도 생겨났다. 저작권법 개정을 담당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전 허락없이 기사 스크랩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개정이 얼마나 일



저작권법 개정 위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